

몰랐나 속았나...재협상 여지도 안남기고 벼락치기 결론

'의혹 투성이' 민선 6기 광주시-맥쿼리 제2순환도로 변경 협약

〈3〉맥쿼리측 전문가에 휘둘린 광주시 재정경감대책단

광주시는 지난 2016년 재정경감대책단(이하 경감단)을 꾸려 맥쿼리측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재구조화 협상을 나섰지만 맥쿼리의 입맛에 맞게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시 1구간 재정 부담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였던 사업재구조화 변경실시협약은 맥쿼리측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고, 재정경감대책단의 요구안도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재정경감대책단 회의 과정에 맥쿼리측 인사가 배석해 맥쿼리의 주장을 대변하면서 경감단 회의는 결국 맥쿼리의 요구에 따라 마무리됐다.

◇6개월 만에 변경협약인 최종 결정=광주시의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 재정경감대책단 회의 결과 보고'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16년 1월 20일 재정경감대책단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같은 해 6월 13일 7번째 회의 끝에 맥쿼리와 사업재구조화 변경실시협약 체결 동의를 결정했다. 재정경감대책단은 민선 5기 재정경감협상에 나섰던 교수, 시의원, 회계사, 시민사회단체, 변호사 등 8명과 광주시 공무원 4명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또 당시 광주시 감사위원장과 재구조화(자부구조 변경) 전문가 황오씨와 모 회계법인 고문 등 3명이 배석했다.

경감단 보고서를 보면 공무원과 배석위원을 제외한 대부분 경감위원들은 "투자비보전방식의 효과가 작다"는 점을 지적했고, 광주시의 체계적인 재정절감 효과 분석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맥쿼리 등을 대상으로 한 회계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용역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전남대산학협력단이 실제 용역을 진행했으며 연구검토보고서를 통해 맥쿼리 측이 법인세를 비용에 포함하고, 고율의 차입금 이자를 적용하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이처럼 현재 제2순환도로 재정경감 과정에 불거진 대부분 문제점은 재정경감단 회의와 전남대산학협력단의 연구 용역 과정에 이미 예상됐었다. 일부 경감단 위원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맥쿼리와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광주시는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경감단위원들로부터 서면 의견을 받아 기존의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을 폐지하고 투자비보전방식을 도입하는 사업재구조화안을 최종 선택했다.

또 배석한 맥쿼리측 인사인 황씨는 "부산-김해경전철 법인세를 인하여 만큼 재정 지원금을 삭감한 소송에서 사업자가 승소했다"(2016년 4월 27일 이하 2016년)며 다른 위원들을 압박했다.

◇경감단 전문가들 "광주시 재정절감 효과 작다" 지적=경감단 회의록에 따르면 대부분 경감단위원들은 회의 초기부터 광주시와 맥쿼리가 기존 최소수입보장방식(MRG; 책정된 통행료 수입보다 85%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에서 대안적 투자비보전방식(MCC; 전체 통행수입에서 운영비, 투자비 등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광주시는 기존 MCC와는 달리 기존 투자자를 변경하지 않아 대

市대책단 6개월간 7차례 대책회의
법인세 비용 포함 등 각종 문제 지적
사업재구조화 협상선 모두 무시
맥쿼리측 전문가 유도대로 결정

안적이라는 문구가 삽입됐다.)에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이에 따라 '협상에 임하는 광주시의 명확한 카드가 보이지 않고 광주시에 가장 유리한 카드를 마련해야 한다'(2월 18일 회의)고 지적했다.

대다수 경감단 위원들은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비보전방식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광주시가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질타했다.

법인세를 비용에 포함시켜 수익을 줄임으로써 결국, 광주시의 재정 부담 늘리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감단위원들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광주시가 법인세를 재정지원으로 대신 납부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맥쿼리가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차입금을 사용해 수익을 줄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감단 회의를 통해 맥쿼리 차입금 3종류(10, 15, 20%에서 3.5, 9.8, 14.7%로 각각 이율을 변경하기로 했으나)이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맥쿼리 측이 시설설치비 100억원을 약속하고 이를 재정경감 규모에 포함시켰는데, 27억원이 투입되는 하이패스는 이미 설치된 시설이다.

경감단 회의 과정에 광주시도 성과에 급급해 서둘러 결론을 내려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광주시는 "맥쿼리는 기본적으로 손해를 안 보는 조건에서 재구조화를 하려한다.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갔으면 좋겠다. 맥쿼리 측의 추가적인 양보안 없다면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4월 27일)면서 경감단을 다그쳤고, 마지막 회의인 6월 13일 투자비보전방식으로 재정경감단 회의의 결론을 냈다.

마지막 회의에서도 "앞으로 더 좋은 조건이 나올 수 있어 (재정경감 협상을) 진행형으로 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광주시는 재협상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경감위원이었던 김동현 전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재정경감 협상이 마무리된 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가 2016년 12월 16일 공시를 통해 '사업가치 및 목표수익률은 유지된다'고 밝힌 것을 보고 광주시의 협상이 크게 잘못 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됐다"면서 "사실상 맥쿼리는 협상 과정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전혀 손해를 보지 않은 꼴이며 광주시만 재정 경감 효과를 부풀려 홍보한 꼴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맥쿼리 측은 "사업재구조화 협상은 2015년 광주시가 제안한 것으로, 광주시는 MRG 방식으로 재정지원금 규모를 1000억원 이상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펀드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양보했다"고 해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



한·뉴질랜드 정상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현지시간) 오uckland 코디스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오uckland 국제공항에서 환송행사를 마치고 대통령 전용기로 뉴질랜드를 떠나 귀국길에 올랐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것을 비롯해 5박8일 간의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한때 무산 위기...당정청·지역사회 총출동 '불씨' 되살려

'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까지

민선 6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시작

추가 투자유치·지속 운영 등 과제

한때 무산 위기까지 처했던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협상은 몇차례 무산 위기를 겪었다. 위기마다 결정적인 '한 수'가 나오면서 간신히 협상을 이어가는 난산 끝에 결국 성과를 냈다. 민선 7기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밀어붙인 이용섭 광주시장의 정확한 판단, 이병훈 광주시 경제문화부시장의 독심과 협상력 그리고 외곽에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정태호 정무대 일자리 수석,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등 정부·여당 인사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민선 6기 공약-추상적인 이론에서 구체적인 사업으로-임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프로젝트)은 민선 6기 운장현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출발했다. 선거의 핵심 공약인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일자리 1만개 창출'이 그 모태가 됐다. 운 시장은 취임 뒤 곧바로 2014년 9월 전남 조직으로 시 사회통합추진단을 신설하고 이듬해 8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오면서 구체화됐다.

2016년 7월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등 사업 추진의 근거도 마련됐다. 하지만 이에 관심을 보인 대기업은 없었다. 시의 지속적인 러브콜에 현대차가 관심을 보인 것은 사실상 민선 6기가 다 끝난 지난

6월에 접어들어서다.

현대차는 6월 1일 광주시에 완성차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유치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처음으로 이 사업에 발을 담갔다. 하지만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가 드러나면서 지난 6월 19일 예정된 현대차와의 투자 협약식이 연기됐고 사업 추진은 급제동이 걸렸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민선 7기 최대 공약으로 내건 이용섭 시장이 바통을 이어받았지만, 협상 타결까지는 그 여정이 녹록지 않았다.

◇초임 연봉 둘러싼 갈등, 지역노동계 이탈로 무산 위기=노사민정의 한 축인 노동계가 민선 7기 들어 협상과정에서 불거진 초임 연봉을 놓고 불만을 드러내며 노사민정 체계가 크게 흔들렸다. 9월 지역노동계(한국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적정 임금 수준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협상 불참을 선언하면서 무산 위기를 맞은 것이다.

어려운 자동차 산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열망과 기대 속에 사회단체,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이 사업 추진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면서 꺼져가는 불씨가 되살아났다. 광주일보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이례적으로 3일 동안 1면 톱기사로 다루며 지역여론을 이끌었다.

현대차는 노동계의 참여 없이는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광주시는 다시 지역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이후 10월 노동계가 참여한 협의체인 '워킹회의'가 만들어지면서 사업 추진은 다시 힘을 얻고 속도를 냈다.

3차례 논의 끝에 노동계 의견을 반영한 협약서가 지난날 1일 만들어졌다. 시, 노동계, 전문가가

참여한 '투자유치추진단'이 꾸려졌고, 시는 추진단 대표로 협상단을 꾸려 현대차와 협상에 돌입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당초 맺은 협상안을 고수하고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는 중북투자 등을 주장하며 파업 불사까지 결의하는 등 다시 난항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전폭적 지지=최와대, 정부, 여당, 야당 등이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도 전례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등이 협상이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지원 사격에 나섰다.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은 지난달 27일 지역 노동계가 협상 전권을 시에 위임하면서 극적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협상단은 현대차 요구를 수용하면서 접점을 찾아갔고 여야 공방으로 국회 예산안 결정이 표류하는 상황에서 4일 현대차와 사실상 극적인 합의를 끌어냈다.

민선 6기에 출발해 4년여만인 민선 7기에 첫 단추를 끼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대장정의 출발점에 섰다. 향후 추가 투자유치, 합작법인 설립, 공장 착공식 등의 일정과 함께 합작법인과 공장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고, 외연을 확장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하는 과제도 남았다. 광주 노사민정 합의 정신의 틀내에서 향후 적정임금, 적정근로시간 등 세부적인 내용들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현대차의 투자로, 향후 광주가 가져다 줄 광주공장과 함께 미래 자동차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동차부품플러스터 조성도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자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 영암, 완도, 진도

- ▶ 한전과 20년 장기계약 안정적 투자
- 모듈: LG-한화큐셀 고효율 단결정
- 인버터: 이태리ABB, 독일카고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 · 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이제 노안과 백내장을 동시에 해결하세요

신세계안과 카탈리스 노안·백내장 수술

- 기존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낭 절개를 수기로 진행
- 카탈리스 노안 · 백내장 수술은 3D OCT 통해 안구 상태 실시간 확인
- 안구 스캔 후 자동으로 3D 알고리즘을 통한 정밀 분석
- 3D 펄스세컨드 레이저 시스템으로 정교한 수술 가능
- 3차원 입체절개 방식으로 개개인의 정확한 맞춤 난시교정 가능
- 개별 맞춤형 다초점 인공수정체 렌즈 삽입으로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시력 가능
- 자동 안구보호 시스템으로 수정체낭 파열, 홍채 손상 등 합병증 방지
- 레이저 최소절개 수술로 다음날부터 돋보기 없이 일상생활 가능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노모양빌딩